

한국연구재단 · 한국장학재단 설립 금물살

글 | 이강봉 _ 사이언스타임즈 편집위원 aacc409@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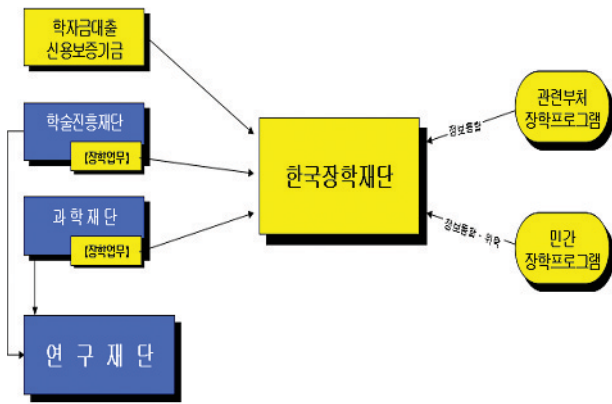
한국과학재단법에 근거해 1977년 5월 18일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은 그동안 구 과학기술부 산하기관으로서 국내 자연계 대학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연구 등 과제를 선별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재외 과학자 유치, 각종 학술회의 개최, 한국과학상과 공학상 시상 등 과학교육 진흥과 연구능력 배양을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한편 1981년 4월 6일 학술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구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기관으로서 학술연구 보조금 지원,

학술연구단체의 운영비 보조, 국내외 학술교류 및 협력 지원, 학술진흥 관련 연구 수행, 학술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 관리 업무와 함께 장학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와 학자금의 무상지급 및 대여 등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구 과학기술부 산하 기구인 한국과학재단과 구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기구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통합한다는 정부 발표는 올 상반기 과학기술계, 교육계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가 돼 왔다. 그리고 지난 5월 29일 한국학술진흥재단 강당에서 열린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과학재단 기능통합과정

한국과학재단 설립 공청회에서는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과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학자금 대출업무 등 정부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들을 가칭 '한국연구재단' 과 가칭 '한국과학재단' 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공개돼 참석자들 간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예산 2조5천억 원 매머드 연구지원기관 탄생

먼저 가칭 한국연구재단 설립 정책연구팀 책임자인 박재민 건국대 교수를 통해 발표된 설립·운영 시안에 따르면 새로 발족할 한국연구재단은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의 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 돼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과학재단 예산이 1조5천억 원, 학술진흥재단 예산이 1조 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60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들 기관 통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연간 예산 2조5천억 원이 넘는 매머드 연구지원기관이 탄생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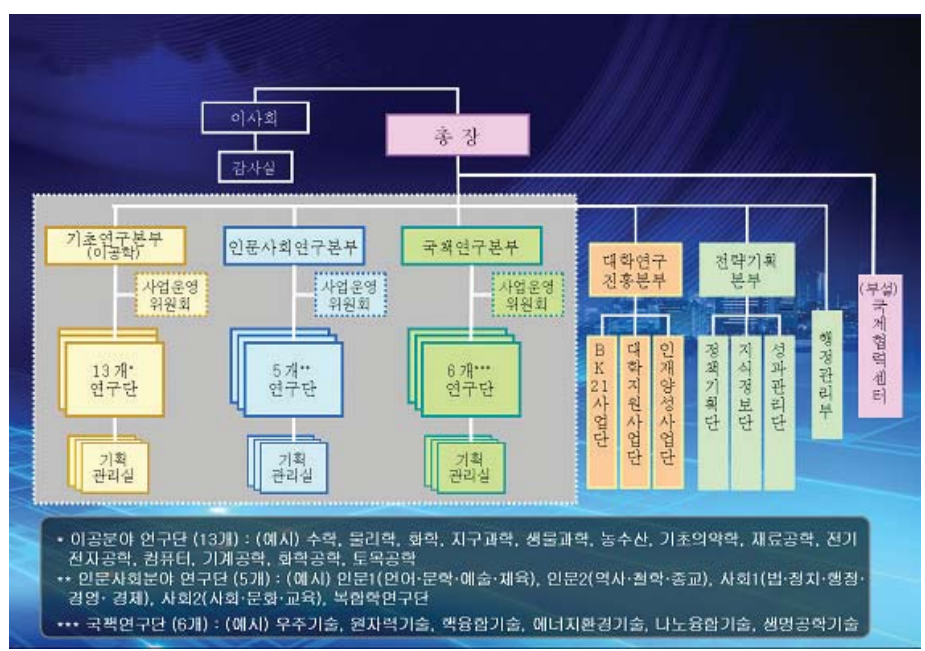
박재민 교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초 및 원천 R&D 투자 확대에 따라 효율적 연구지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최대 과제가 돼 왔다”며 “(한국연구재단 설립에 있어) 이공, 인문, 융합, 국제협력 연구 등 전 분야를 총괄하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체제를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연구자의 불

편을 해소하는 것 등을 중점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연구자 친화적 지원 시스템, 전문성 중심의 연구기획 평가체제, 창의성 중심의 우수 과제 발굴 등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을 세계 수준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기존 조직과는 다른 혁신적인 조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배와 경영 분리를 위해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기관장은 상근으로 구분해 조직을 통괄토록 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 연구과제 선정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을 지는 프로그램 매니저(PM)제도, 사업운영위원회 등을 활성화하는 등 철저하게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 조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PM제도와 관련, 박 교수는 “2006년 기준 미국과학재단(NSF)이 438명, 영국 엔지니어링물리과학연구위원회(ESPRC) 60명과 비교해, 과학재단이 6명, 학술진흥재단이 3명에 불과하고, 1인당 과제 수에 있어서도 미국 NSF가 50개, 영국 ESPRC가 22개에 불과한 반면 과학재단은 262개, 학술진흥재단은 1천535개에 이르고 있다”며 “분야별로 충분한 수의 PM을 배치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M의 권한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PM에 예산 배분 및 기획평가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고위험·혁신적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 재량 범위를 확대하고, 과제 평가에 있어서도 최종 연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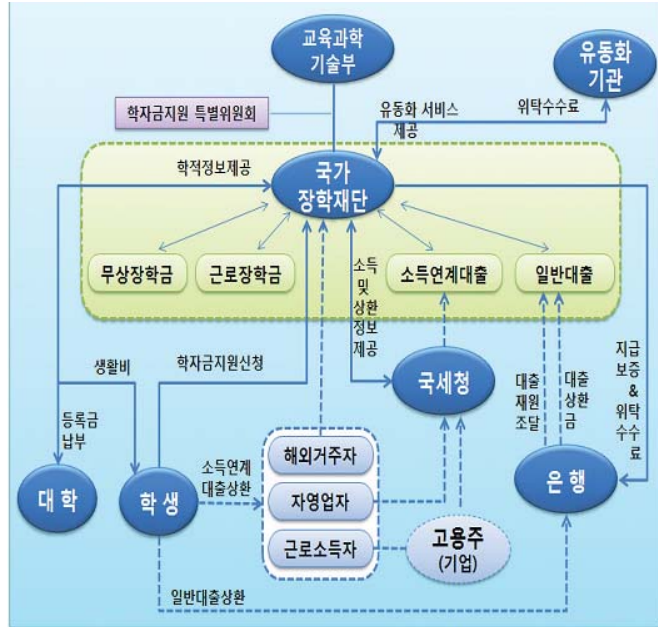
한국과학재단 조직설계 방안

선정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과제 선정, 평가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인 중심으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PM을 최종 평가토록 하고, 가칭 'PM 윤리강령'을 마련해 PM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사 업무 통합, 거액의 장학금 조성

남수경 강원대 교수는 그 동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정책연구팀(책임자 : 하연섭 연세대 교수)가 준비해온 가칭 한국장학재단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 산하기관으로 흩어져 있는 학자금 지원 업무, 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보증,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금 및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 학술진흥재단의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및 미래한국인문학장학금, 과학재단의 이공계 국가장학금 및 지역 대학 이공계 우수 장학금 업무 등을 한국장학재단으로 흡수 통합해 학자금 지원사업을 총괄토록 하자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현행 국가장학사업의 문제점으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의 절대 부족, 교육필요경비 산출결과에 근거한 학자금 지원체제의 미비, 학생특성별 장학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체제의 부재, 재정지원과 학업준비 간의 효율적 연계 프로그램의 부재, 장학기금의 충분화 확보와 효율적 운용체제 미비, 국가 장학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제 부재, 국가장학사업의 효율적 관리



국가장학사업 운영체계

및 평가체제 부재 등을 열거했다.

박 교수는 학업 능력과 의욕이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학정책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1단계로 가칭 한국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현행 정부부처 장학사업을 내국인 대학생과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고교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 지원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2단계로 국내 학생의 대학진학에 대한 학업 및 재정 지원, 국내 학생의 외국 대학 진학에 대한 재정지원, 외국인 학생의 국내 대학적응에 필요한 언어, 재정지원 등 각종 생활지원을 위한 학생교육지원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칭 한국학생지원공사)로 확대 개편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설립을 준비 중인 한국장학재단의 사업내용과 관련해서는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총괄 기획업무, 학자금 지원신청 및 지급, 학자금 대출상환 등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 수행하면서 국제 발행이나 민간기금 유치 등의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고 자금운용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득연계 학자금대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출금 상환업무가



PM제도 개선방안



건국대 박재민 교수의 발표모습

소득세 납부와 연계될 수 있어야 하며, 국세청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국가장학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학자금 지원을 위해 현재 정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회계 및 기금을 장학기금 출연방식으로 통합하고, 국채 발행, 복권사업 등을 통해 민간재원을 발굴, 대학의 여유자금 활용, 민간 장학단체의 업무 대행 등을 통해 국가장학기금을 조성해 소외계층, 저소득 계층을 포함한 학생 전반에 걸쳐 학자금 대출사업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경영·재단독립성 등이 관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연구재단 설립 시안과 관련 “4만5천여 명의 인문, 사회 분야 교수의 의견이 더 반영돼야 한다”며 책임경영, 재단 독립성 등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대 남수경 교수

김병기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선임연구부장은 “민간 PM들이 연구자로서 소속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지킬 수 있을 지는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여준구 한국항공대 총장은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문제점을 국제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NSF 안에 있는 PM들 간의 협력사례를

소개했다. 김철구 연세대 교수는 “정부의 연구지원 체계가 이공계, 인문계 분야에서는 자금 에이전시의 역할을, 우주, 원자력, 핵 등의 분야에서는 평가 에이전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학술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NSF와 같은 학술(연구)이사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학재단 설립 시안과 관련, 안전결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교육의 공적 책임과 의무를 공공기관에서 윈스톱 서비스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교육재정 6% 확보와 반값 등록금 등의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임봉 대학 학생처장 협의회장(수원대 교수)은 “교내 시위의 90% 정도가 등록금 때문에 비롯된다”며 “재벌들의 사회환원금을 장학재단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한편 교과부는 지난 6월 18일 한국과학재단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의 (가칭) ‘한국과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한국과학재단은 단기적으로는 교과부 소관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타 부처 및 민간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자금대출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먼저 다양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재단 명의의 채권을 발행하고, 타 기금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하며, 학자금 대출증권(유동화)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민간 기부자 명의의 장학사업과 장학재원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확대 사업영역을 대폭 확대했다.

또 법률에서 규정한 맞춤형 학생의 ‘윈스톱 학자금 조달’을 위해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폭넓은 상담을 제공하고, 민간 학자금 지원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했으며, 민간 장학법인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장학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내용 및 실적 등을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해 학생들이 장학금 지원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역사병의 경우는 복무기간 중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러나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적극 노력해야 하는 책무규정을 삽입했다. ㉔